

칼럼

김화진 서울 대 법학대학원 교수



삼성의 회장감시위원회

삼성그룹이 9일 그룹 차원의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빌려 시켰다. 첫째, 계열사들이 이미 상당히 세련된 준법감시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번 출범의 변을 보면 단순한 준법감시 업무외는 거리가 있는 경영권 승계 문제에까지 관여하겠다고 하므로 사실상 회장감시위원회라고 불러도 좋을 듯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금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용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실제로 재판부가 주문한 데 대한 답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항상 뭔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 외부 충격에 의해 자신을 돌아보고 정비한다. 특히 준법감시는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영리기업들에게 돈 버는 일보다 급한 일은 아니다. 항상 뒷 전이기 마련인데 특별한 계기로 다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선처를 위한 명분용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염려에는 우리의 통상적인 사회 경험에서 나오는 예단적 편견이 반영되어 있다. 어떤 재판부도 구체적 사건에서의 사법 정의 실현을 양보하면서 사회개혁적 아젠다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그 자체의 의미로 해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몇 가지 염려되는 사항들이 있다. 많은 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번에 빌려하는 준법감시 위원회는 단체법인 상법의 기반 위에 있지 않고 계약적인 기초에 의한다.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에 의존하는 일종의 자치기구다. 주식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이자 감독기관인 이사회가 기업 집단의 법률적 특성 때문에 총수 경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도입된 것이다. 각 계열사 주주들이야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사회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준법감시위원회의 감시를 받는다 해도 법률적 책임은 각 이사회가 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내부에 준

법감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외부에 있는 기구에 전적으로 협력할 회사 구성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 문제다. 실제로 시장에서 시작해서 신입 사원까지 자신의 회사 내 미래와 별 무관한 곳과 얼마나 공조하려고 할까. 당장 지원 인력으로 파견 나가고 싶어하는 사원들이 얼마나 있을지 따져 보면 답이 나을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나온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에게는 매우 민감한 노조문제까지 다룬다고 한다.

사정이 그럴진대 회사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공인된 인사들도 참여해서 운영되는 조직은 회장이 아무리 지원한다 해도 회사 내부에서는 그 진정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몸을 시뻘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이사회 결의를 하고 협약을 체결해도 본질적으로 회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직이다. 법률적으로는 각 계열사 사장과 이사회에 대한 감시위원회지만 사장은 회장이 감시하고 이사회는 법률에 위반되거나 비윤리

적인 결이나 활동을 할 가능성성이 없으므로 크게 감시할 일이 없다.

단점은 모든 일이 '회장님 선'의 일이 되는 순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이다. 삼성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답지 않게' 허술하고 황당한 일들이 일어난 배경에는 대부분 회장님 선에 대한 조직행동적인 고려가 있다. 많은 회장이 이를 탑재해 하지만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에게는 치하를 할 수는 없어도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사실상 회장감시위원회지만 역설적인 것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같은 일이 빅터될 가능성이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 회장도 정치권의 압력에 할 말이 생겼다. LG의 고 구본무 회장은 국회청문회에서 '국회가 법률로 정경유착을 막아달라'고까지 했다. 회장을 감시할 일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역할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재벌 회장도 공식적으로 감시 대상이라는 상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베스트 프랙티스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삼성 준법감시 위원회의 성공을 바란다. 다만 기업자구조 허브로서 각 사의 이사회가 갖는 중요성과 기능, 책임감이 희석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社說

동물학대 엄단해야 한다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등 동물학대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니 기대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보면, 정부는 동물학대를 유형별로 나누고 처벌 수준도 지금보다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핵심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상해를 가하는 행위'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구별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 대상도 목을 매다는 등 임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이다.

다만, 식용견 관리나 보호에 관한 내용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빠졌다. 정부의 이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가 동물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기출인신고	182	▲ 인광 일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신고	383-0019

긴급전화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에는 모두가 설렘으로

'설레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고 듣는 말이지만 이처럼 설레임이라는 문구는 우리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든다. 넘나간에 처음 만났을 때도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에 마음이 벅차게 된다.

설레임은 또 다른 삶의 궁금증과 산비의 세계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설레임의 문구는 올바른 말이 아니다. 설레임이 맞는 말이다.

내 마음이 들뜨는 것은 내 스스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지 누가 나에게 설레라고 강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여 말을 한다. 하지만 문구 중에 이름답고 꿈과 희망을 주는 단어는 드물다. 2020년 새해가 며칠 지나고 있다. 서민들은 새해를 맞는 "설렘"이나 희망보다는 경기침체로 인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새해에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서민들이 포근하게 살며 행복하게 사는 일들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해 본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올해도 당연히 취업일 것이다.

겨울이지만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 얼어붙어 있는 이 세상을 훈훈하고 아름답게 녹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건전하고 희망찬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다.

취업준비생을 둔 가정에서는 취업을 위해 부모님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가족 모두가 취업을 위해 고민하는데 취업 준비하는 당사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새해는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취업에 성공하고 설렘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새해는 청년들 모두가 취업 성공으로 청년실업해소 및 청년들이 바라는 열린 한해가 다 이루어지고 설렘으로 가득 찬으면 한다.

희망찬 새해는 수많은 희망사항이 있겠지만 안전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새해에는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 봤으면 좋겠으며 안전하게 보내는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도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국가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향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다.

국중균 / 광주북부소방서 지휘담당

등록번호 광주기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62기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